

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국회사무처

2018년9월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상정된 안건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1

(10시02분 개의)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위킹(moonwalking), ‘한국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정책이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 지난 7월 로이터통신이 뽑아낸 기사 제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위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문재인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외신조차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문위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위킹에

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납니다.

문재인 정권 500일, 경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용 참사, 분배 참사, 성장률 참사가 동시다발로 터져 나왔습니다.

저 김성태, 경제 반토막에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반기업·반시장 정서가 낳은 한국 경제 눈물의 씨앗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 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경제 축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입니다.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입니다.

저와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파탄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 피싱입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입니다. 가계경제, 나라경제 모두 결판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가 입증됐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 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의 고리입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로 그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습니다.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다발로 크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험 불장난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합니다. 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오버하고 나섭니다. 국민들의 지갑도 국가가 채워 주겠다고 공언합니다. 자연스럽게 세금 물빵 경제 늪에 빠져들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 성장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정권은 내년도에 슈퍼 매머드급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공짜 점심은 단연코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 카펫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나라 전체가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흥청망청대다가 결국 국가 파산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나라 경제는 정권이 오기를 부릴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아집과 독선으로 밀어붙일 대상도 절대 아닙니다. 이념의 도구도 아닙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더 어렵습니까?

정부와 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국판을 당장 멈추십시오. 정책 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십시오. 잘못된 경제기조를 대전환해야 합니다. 경제파탄에 신음하는 민심의 단호한 명령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세금 뺄소니 정권입니까? 임기중에 무차별 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같이 묻지 마 세금살포 범죄를 결코 벌일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 내겠습니다. 나라 재정 구멍 내는 세금중독 적폐를 반드시 막겠습니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로마가 번영을 구가하면서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공짜로 먹을거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성실히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살기보다는 국가가 뿌린 세금으로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 시민들을 위해 정치인들은 콜로세움에서 사자, 호랑이, 검투사들의 피 비린내 나는 그 모습을 로마 시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지배층과 시민들의 방탕함이 극에 달해 로마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로마의 쇠퇴는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 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 교활한 국정 운영에 국민들은 치를 떨 뿐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어야 할 곳에 국가가 있는 기형적인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 성장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명백한 허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금중독 적폐 그만하고 이제 경제 좀 살리랬더니 문재인 정권은 또다시 적폐청산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1명씩 내리쬐는 낙하산 보은 인사, 패륜과 불륜에 휩싸인 이재명과 안희정, 이 정권 핵심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이야말로 진짜 적폐 아닙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런 적폐는 그대로 남겨 두고 무슨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에게 철퇴를 내릴 용의가 있습니까?

지난 과거 정권 인사들만 때려잡지 말고 이 정권의 살아 있는 적폐들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명이 무너졌습니다. 금년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제안합니다.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행하자면 연 40만 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000만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 원, 매월 33만 원씩 소요됩니다.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 원씩, 연간수당은 첫째 1조 6000억을 시작으로 매년 1조 6000억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 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356조 원, 연평균 1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 4000명을 대거 증원하는 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이런 부도덕한 예산 투입은 중단해야 합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처럼 현재의 공무원 인력구조를 대대적으로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자리 IMF’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고용 쇼크가 발생한 이유가 뭐니까?

첫째, 문재인 정권 특유의 반기업 정서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는 세율 인하,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기를 살려서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기업을 적대시하니 어느 기업이 제대로 된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그 결과는 고용 참사입니다.

일자리란 기업이 만듭니다. 국민혈세로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정권은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못 정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 정부 여당에 묻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주적이 기업입니까? 어쩌다 문재인 정권의 주적이 기업이 되었습니까?

얼마 전 손경식 경총 회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경단련 회장을 맡고 있는 히타치 그룹의 나카니시 회장이 한국 청년 1000명을 채용했다고 손 회장께 자랑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손경식 회장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창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바다 건너 일본 기업에 취업해야 합니까?

지금 기업의 반토막 투자는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정서 때문 아닙니까?

기업을 튼튼하게 키워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최선의 일자리 정책입니다.

둘째, 반시장 정서에 기댄 국가주의적 개입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지금 시장과 맞서고 있습니다. 일자리 율화통도 이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입니다.

국가가 ‘오지라퍼’가 돼선 안 됩니다.

50여조 원 국민 혈세를 미친 듯이 쏟아부었지만 고용인원이 겨우 5000명 늘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극치입니다.

이제 국가주도 관치경제의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문재인 정권은 십수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말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셋째, 고용 참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전 때문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저소득자, 구직자, 청년·노년층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없는 사람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소상공 자영업자의 피해도 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 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계청장 찍어 내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로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직을 걸고 열심히 하라고 정부 관료에 한 말씀 온 국민이 푹푹히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통계청장의 직은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웬일입니까?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통계를 국민들께 고스란히 알리는 통계청장이 그리도 눈엣가시였습니까?

막후에서 이 정권과 통계 거래를 시도한 바로 그 사람을 후임 통계청장에 앉힌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계수치에 인공 조미료 MSG를 듬뿍듬뿍 넣겠다는 불순한 의도 아닙니까? 통계청에도 탁현민이 필요했습니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소득주도성장 사수를 위해 분식통계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통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통계 조작 시도에 이어 여론 조작도 심각합니다.

얼마 전 드루킹 특검이 아쉽게 종료됐지만 이번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에 집중해서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 조작입니다. 특히 댓글 여론 조작이 지난해 조기 대선에 집중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입니다.

대선 수개월 전 조작 횟수가 수천, 수만 건에서 대선국면이 본격화된 작년 4월에는 무려 760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드루킹 일당이 이렇게 760만 건의 댓글 조작을 했겠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민주당 정권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사안이 아주 심각하고 중대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기 위한 통계 조작 시도, 대선 공간에서의 댓글 여론 조작, 한마디로 쌍끌이 대중 조작입니다.

이 정권은 경제는 마이너스 손인데 각종 대중 조작에는 신의 손입니다. 향후 재판을 통해 댓글 조작의 진실이 낱알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제 드루킹 2라운드 시작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댓글 여론 조작 폐쇄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특히 댓글 여론 조작 몸통에 관한 남겨진 퍼즐을 맞추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 폭주가 아주 심각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이라는 큰 기조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노동 현장 상황과 노사 입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설익은 정책입니다.

지금 노동 현장에서는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투잡을 뛰어야 하나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국가의 일방적인 오더로 밀어붙일 게 결코 아닙니다. 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입장이 존중돼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폭주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정책 과속방지턱을 마련하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과 계절, 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부분 등은 당사자간 자율 합의에 의해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 증대를, 사용자 입장에서는 납기기일 준수 등 노사가 윈윈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300만 당원과 함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도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 주는 정책 실패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의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수해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전광판을 가리키며)

저게 뭘니까! 지반은 침하되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 처참하게 붕괴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뭘니까! 탈원전만 부르짖으며 환경의 ‘환’ 자도 모르는 자들이 저지른 선부른 태양광 발전 정책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원전기술에 도대체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여한 것도 없는 이 정부가 원전 폐쇄로 대체 무엇을 얻는단 말입니까? 양심도 없이.

안으로는 탈원전을 부르짖으며 밖으로는 원전

을 수출하는 그 이중성에 전 세계인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겁니다. 탈원전 정책 실패의 뒷감당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토대로 마련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원전건설 백지화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원전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산업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도 자유한국당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반드시 잡혀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거듭 촉구합니다. 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협치의 시작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갈팡질팡 국민연금 무대책에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합니다.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1%p만 높여도 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6%대의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이 정권 들어서 1%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은 국민 노후보다 정권 노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20년 장기집권을 궁리하는 사이 국민 노후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국민연금 장기대책은 무엇입니까? 연금 확보 방안은 있기는 있는 겁니까?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이 정권은 국익을 위해 덮고 가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짜 국익입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약속한 대북제재를 엄수하는 것이 진짜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대북제재 압박의 핵심은 북한산 석탄입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이 없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였습니까?

정부가 오래전부터 북한산 석탄을 인지하고 수차례 청와대 대책회의까지 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즉각 수용하십시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겠습니다.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현실화하면 보다 통 큰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 여부는 시간이 가려 줄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 핵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은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 당시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환상에 들뜬 감성적 접근보다 이제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관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의 지금 행태를 보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습니다. 경제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운운하며 북핵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 접근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 폐기 철벽 공조에 보다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안보 무장해제가 아니라 북한이 무서워하는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 북핵 폐기를 앞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대통령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결코 아닙니다. 확고한 국제 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 폐기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회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나라가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정권의 잇따른 정책 실패가 우리에게 결코 꽃놀이패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따른 고통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이 먼저 정신 차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 정당,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개혁 정당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기하겠습니다.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책 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 정당임을 입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제왕적 대통령 정치는 대한민국이 4만 달러 선진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정파를 넘어 대한민국의 비극을 초래해 왔습니다.

최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 안팎에서 무르익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5월 대선 직후 당시 5당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 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권력구조 개편도 수용할 뜻이 있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단군 이래 정치 호황을 최대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견제세력을 쏙대발으로 만들어 놓고 나홀로 독주했습니다. 대통령 정치

만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비상경제 시국입니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준비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잣더미를 딛고 건국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는 데 경제당 자유한국당이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가계경제를 살리고 나라경제를 일으키는 데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을 적극 돕겠습니다.

은산분리 완화안이 여당 내부 분열로 8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지역 전문산업 육성과 지역발전 이 모든 것의 집행은 문재인 정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까? 집권 여당 스스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야 상설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 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께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한 번 더 읊어 드리겠습니다.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합니다. 이제 국회의 협치의 큰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훈수 하나 두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죽을 췌고 있는 문제는 이번에는 이제 양도세 여기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면제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앞으로 3년 이상 거주요건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집값은 오를 대로 올라서 강남 집값이 안드로메다로 나아갔다고 하는 마당에 뒤늦게 단타 수요 막겠다면서 이 땀질처방 계속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시장에 혼란과 불편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입니다. 투기 잡겠다고 세율을 강화하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슬쩍 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부동산 경기도, 부동산 투기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투기도 억제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 가는 차원에서 실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에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끝으로 엇그저께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2018년도 정기국회 개원 연설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입법부 수장께서 블루하우스 스피커를 자처하십니까?

(「예의를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심판이 선수로 뛰려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국회에서 예의를 지켜야지, 도대체……」 하는 의원 있음)

한 나라의 입법부 수장이……

(장내 소란)

자, 좀 조용히 하세요.

(「예의를 지켜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한 나라의 입법부 수장으로서 품격도 상실하고 균형감각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코드 개회사였습니다.

(「국회의장 모욕을 해?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사과해!」 하는 의원 있음)

아무리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본연의 책무인 행정부 감시는 소홀히 하고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견제와 균형에 있다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를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입니다. 의회가 균형을 상실할 때,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할 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아픔과 애환과 고충을 대변하는 민생의 전당으로 거듭 태어나길 자유한국당은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하는 의원 있음)

(「잘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수)

○의장 문희상 김성태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뜻한 충고 잘 들었습니다.

내 정치인생 통틀어서 국회가 국회다워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제 의회 의장 임기 동안 청와대나 정부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제 정치인생을 몽땅 다 걸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의장이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한다는 사실을 가슴 속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 의원(275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옥	김 부 겸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원	김 성 찬
김 성 태	金 成 泰	김 성 환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영 호	김 용 태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미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도 종 환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옥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현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해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중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갑 석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김 김 병 옥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김 김 선 동
 신 상 진 신 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김 김 성 찬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김 김 순 레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김 김 영 춘
 엄 용 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세 정 김 김 재 원
 오 신 환 오 영 훈 우 상 호 우 원 식 김 김 종 민
 원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 기 준 김 김 진 태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승 민 김 김 한 정
 유 승 희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김 김 현 미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김 김 도 종 환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김 김 박 경 미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김 김 박 병 석
 이 군 현 이 규 희 이 동 섭 이 만 회 김 김 박 완 수
 이 명 수 이 상 현 이 석 현 이 양 수 김 김 박 정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용 득 이 용 주 김 김 백 재 현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김 김 서 영 교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정 이 정 미 김 김 송 기 헌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찬 열 김 김 심 기 준
 이 종 배 이 철 규 이 철 희 이 헌 승 김 김 안 규 백
 이 학 영 이 후 삼 이 해 찬 이 인 재 김 김 어 기 구
 이 혜 훈 이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김 김 원 유 철
 임 이 자 임 종 원 전 재 수 전 해 철 김 김 유 동 수
 장 정 숙 장 제 원 정 갑 윤 정 동 영 김 김 유 의 동
 전 현 희 전 회 경 정 용 기 정 우 택 김 김 윤 소 하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인 화 정 재 호 김 김 이 개 호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춘 숙 정 태 욱 김 김 이 만 회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승 래 조 응 천 김 김 이 완 영
 제 윤 경 조 경 태 조 광 덕 진 선 미 김 김 이 은 재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최경환(평) 김 김 이 정 현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교 한 정 애 김 김 이 종 배
 채 이 배 천 정 배 최 윤 열 최 혜 선 김 김 이 채 익
 최 도 자 최 연 혜 최 미 애 추 정 애 김 김 이 학 영
 최 재 성 추 경 호 추 선교 표 홍 영 표 김 김 이 후 삼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선 교 홍 일 표 김 김 장 석 춘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철 호 김 김 전 해 철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김 김 정 용 기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회 김 김 정 진 석

김 김 기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김 기 김 병 관 김 김 병 옥
 김 김 기 김 상 훈 김 김 선 동
 김 김 기 김 성 식 김 김 성 찬
 김 김 기 김 성 태 김 김 순 레
 김 김 기 김 승 회 김 김 영 춘
 김 김 기 김 영 호 김 김 재 원
 김 김 기 김 정 우 김 김 종 민
 김 김 기 김 종 석 김 김 진 태
 김 김 기 김 철 민 김 김 한 정
 김 김 기 김 한 표 김 김 현 미
 김 김 기 김 현 아 김 김 도 종 환
 김 김 기 김 온 국 김 김 박 경 미
 김 김 기 김 광 온 김 김 박 병 석
 김 김 기 김 선 숙 김 김 박 완 수
 김 김 기 김 용 진 김 김 박 정
 김 김 기 김 찬 대 김 김 백 재 현
 김 김 기 김 해 련 김 김 서 영 교
 김 김 기 김 형 수 김 김 송 기 헌
 김 김 기 김 석 준 김 김 심 기 준
 김 김 기 김 보 라 김 김 안 규 백
 김 김 기 김 상 정 김 김 어 기 구
 김 김 기 김 수 영 김 김 원 유 철
 김 김 기 김 영 봉 김 김 유 동 수
 김 김 기 김 중 규 김 김 유 의 동
 김 김 기 김 한 홍 김 김 윤 소 하
 김 김 기 김 군 현 김 김 이 개 호
 김 김 기 김 상 현 김 김 이 만 회
 김 김 기 김 용 득 김 김 이 완 영
 김 김 기 김 우 김 김 이 은 재
 김 김 기 김 정 김 김 이 정 현
 김 김 기 김 찬 열 김 김 이 종 배
 김 김 기 김 헌 승 김 김 이 학 영
 김 김 기 김 인 재 김 김 이 후 삼
 김 김 기 김 석 춘 김 김 장 석 춘
 김 김 기 김 해 철 김 김 전 해 철
 김 김 기 김 동 영 김 김 정 용 기
 김 김 기 김 우 택 김 김 정 진 석
 김 김 기 김 태 욱 김 김 조 경 태
 김 김 기 김 천 김 김 조 훈 현
 김 김 기 김 용 김 김 주 광 덕
 김 김 기 김 영 김 김 진 선 미
 김 김 기 김 일 김 김 최경환(평)
 김 김 기 김 호 김 김 최 윤 열
 김 김 기 김 선 김 김 추 정 애
 김 김 기 김 표 김 김 홍 영 표
 김 김 기 김 철 김 김 홍 철 호
 김 김 기 김 장 김 김 정 회 경
 김 김 기 김 속 김 김 정 유 섭
 김 김 기 김 경 김 김 정 춘 래
 김 김 기 김 습 김 김 조 승 래
 김 김 기 김 자 김 김 주 승 용
 김 김 기 김 정 김 김 이 철 규
 김 김 기 김 재 김 김 이 학 재
 김 김 기 김 속 김 김 임 이 정
 김 김 기 김 경 김 김 장 회 경
 김 김 기 김 습 김 김 정 유 섭
 김 김 기 김 래 김 김 정 춘 래
 김 김 기 김 덕 김 김 주 광 덕

○개의 시 재석 의원(214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석 진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광 대 훈
 광 상 도 권 미 혁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황영철
황주홍	황희		

○산회 시 재석 의원(254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관영	김광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성환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소하	윤영석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헌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혜훈	이후삼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춘숙	정태욱	제윤경
조승래	조웅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평)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출장 의원(2인)

이수혁 이현재

○청가 의원(9인)

강창일	김영주	박주선	송영길
오제세	이상돈	전혜숙	정양석
조배숙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유인태
의사국장	권영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낙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외교부장관	강경화
통일부장관	조명균
법무부장관	박상기
국방부장관	송영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	운	규
보건복지부장관	박	능	후
환경부장관	김	은	경
여성가족부장관	정	현	백
국토교통부장관	김	현	미
해양수산부장관	김	영	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	중	학

○출석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	형	권
고용노동부차관	이	성	기

【보고사항】

○의안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심재철 · 유기준 · 신보라 · 김광림 ·
곽대훈 · 추경호 · 박완수 · 이장우 · 정중섭 ·
강효상 · 조훈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이찬열 · 황주홍 · 김수민 · 조정태 ·
이용호 · 권칠승 · 이동섭 · 김철민 · 오제세 ·
김종희 · 김삼화 의원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김정호 · 전재수 · 김현권 · 민홍철 ·
오영훈 · 백재현 · 김영진 · 황주홍 · 안호영 ·
임종성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이찬열 · 윤후덕 · 황주홍 · 권칠승 ·
위성곤 · 신용현 · 김삼화 · 이동섭 · 전현희 ·
김광수 · 김경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이재정 · 백혜련 · 기동민 · 안규백 ·
신창현 · 고용진 · 홍의락 · 박찬대 · 김철민 ·
박정 · 이상현 · 김영호 · 정춘숙 · 오영훈 ·
원혜영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김경진 · 고용진 · 이찬열 · 김광수 ·
주광덕 · 유동수 · 윤영일 · 김삼화 · 이동섭 ·
김종훈 · 최경환(평) · 손금주 · 김수민 · 최도자 ·
금태섭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추경호 · 김광림 · 김정재 · 박명재 ·

김선동 · 이종배 · 김상훈 · 정갑윤 · 송언석 ·
강석호 · 김재경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김수민 · 김관영 · 채이배 · 이태규 ·
최도자 · 김동철 · 이연주 · 주승용 · 신용현 ·
박주선 · 이동섭 · 이학재 · 이찬열 · 김삼화 ·
김성식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이재정 · 김병기 · 조승래 · 김민기 ·
박찬대 · 서영교 · 안민석 · 정춘숙 · 홍익표 ·
이규희 · 김영호 · 고용진 · 원혜영 · 인재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이재정 · 홍의락 · 조정식 · 김병기 ·
김정우 · 박찬대 · 추미애 · 김민기 · 박정 ·
이상현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김동철 · 정태옥 · 이태규 · 김수민 ·
김석기 · 김삼화 · 장병완 · 이정현 · 황주홍 ·
이찬열 · 송옥주 · 신용현 · 오신환 · 김관영 ·
주승용 의원 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김동철 · 정태옥 · 이태규 · 김수민 ·
김석기 · 이정현 · 황주홍 · 송옥주 · 신용현 ·
오신환 · 김관영 · 주승용 의원 발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송기현 · 유동수 · 심기준 · 신창현 ·
이춘석 · 백혜련 · 김종민 · 김성수 · 안호영 ·
금태섭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신보라 · 홍문표 · 추경호 · 김선동 ·
이양수 · 함진규 · 송희경 · 박덕흠 · 박명재 ·
문진국 · 이철규 · 이현재 · 이종명 · 경대수 ·
이완영 의원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김종희 · 윤영일 · 유성엽 · 김광수 ·
천정배 · 이용호 · 최도자 · 손금주 · 장병완 ·

조배숙 · 황주홍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2018. 9. 4. 김영호 · 서삼석 · 김병욱 · 윤준호 · 전해철 · 조승래 · 제윤경 · 신창현 · 강훈식 · 김철민 · 김현권 · 심기준 · 노웅래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 발의)

(2018. 9. 4. 김성찬 · 주광덕 · 경대수 · 박성중 · 김석기 · 이종명 · 이명수 · 박덕흠 · 최연혜 · 김태흠 의원 발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김성찬 · 김승희 · 추경호 · 최연혜 · 이명수 · 경대수 · 윤영일 · 주광덕 · 박덕흠 · 성일종 의원 발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2건 2018. 9. 4. 정부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주광덕 · 김경진 · 곽상도 · 박명재 · 정갑윤 · 김정재 · 김성찬 · 전희경 · 이완영 · 김선동 · 추경호 의원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기동민 · 이철희 · 김철민 · 김상희 · 김병기 · 정춘숙 · 이재정 · 전해숙 · 고용진 · 이춘석 · 전현희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 발의)

(2018. 9. 4. 주광덕 · 김경진 · 곽상도 · 박명재 · 정갑윤 · 김정재 · 김성찬 · 전희경 · 권성동 · 이완영 · 성일종 · 김선동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정성호 · 김관영 · 정춘숙 · 홍의락 · 고용진 · 김철민 · 조배숙 · 윤후덕 · 윤관석 · 이원욱 · 김경협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8. 9. 4. 이찬열 · 황주홍 · 김수민 · 조경태 · 권칠승 · 이동섭 · 김철민 · 오제세 · 이언주 · 김종희 · 김삼화 의원 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8. 9. 4. 천정배 · 김광수 · 박주현 · 장정숙 · 유성엽 · 이용주 · 황주홍 · 김동철 · 손금주 · 정인화 의원 발의)

이상 26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서면질문서 제출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관한 질문서

(2018. 9. 4. 천정배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9월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북한산 물품 반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18. 9. 4. 정부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18년도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 연차보고서
2018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연차보고서

(이상 2건 2018. 9. 4.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에 송부